

「신·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」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

2014. 08. 12.

전 기 통 신 금 융 사 기 방 지 대 책 협 의 회

- 금융위원회 · 미래창조과학부 · 법무부

경찰청 · 해양경찰청 · 금융감독원 -



목 차



I . 신 · 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성과 ..	1
II . 신 · 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한계	3
III . 향후 추진과제	4
▶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	5
▶ 스마트폰 보안 기술 강화	6
▶ 피싱 · 파밍 사이트 차단서비스 적용대상 확대	7
▶ 악성코드 유포 방지 방안 추진	8
▶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	9
▶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사 강화	9
▶ 대포통장 과다 발급 관리 강화	10
▶ 지연이체제 도입	11
〈참고〉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 추진 현황 · 계획	12

I. 신·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성과

<점검 배경>

- ◆ ‘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’는 신·변종 금융사기 증가세에 대응, ‘13.12월 「신·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」을 발표

*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범부처 협의회(총리훈령에 근거) : 금융위, 미래부, 법무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금감원 등으로 구성

- ➡ 조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단계(문자발송·정보탈취→불법 이체·결제→수사)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

1 추진 현황

(가) 금융사기발생의 대응체계 강화

- [스미싱] 이통사-KISA간 협력을 통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¹⁾(‘13.12월~), 휴대폰발송 번호변경 문자차단(‘14.2월), 앱 자동 다운로드 제한²⁾ 적용

1)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이통사로부터 스미싱 의심문자를 전달받아 분석한 뒤 악성앱 확인시 해당앱 다운로드 서버의 차단을 이통사에 요청

2)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정식 앱 마켓이 아닌 ‘알 수 없는 출처’로부터 앱 다운로드를 매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설치를 제한

- [피싱·파밍] 파밍 사이트로의 접속을 감지·차단하는 시스템 구축¹⁾(‘13.9월~), 신규생성되는 피싱사이트를 조기에 발견·차단²⁾(‘13.12월~)

1) 국내 공공·금융기관의 국내사이트 접속시도시 해외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탐지하여 ISP를 통해 해외 파밍사이트로의 이동을 차단

2) 국·내외 신규 생성 도메인을 매일 분석하여 피싱사이트일 경우 차단조치 중

- [메모리해킹] 은행권,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에 메모리해킹 방지기능 보완(‘13.12월) 및 수취계좌 번호·이체금액 입력까지의 단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등 메모리해킹 의심시 SMS 또는 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강화^{*}(‘14.7월)

* 예비거래(수취계좌번호·이체금액 입력까지의 단계)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등 메모리해킹 의심시 SMS 또는 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실시

(나) 사기발생시 '피해 최소화'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

- 사전지정 입금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'新입금계좌지정제'의 가이드라인을 마련('14.3월)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시행 준비 중
- 해킹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**소은행권에 행정지도**를 실시('14.7월)하여 해킹피해금의 회수가능성을 증대

(다)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수사 및 국제공조 강화

- 韓·中간 수사협약체 창설 합의('14.4월), 합동대응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('14.14월), 美FBI 사이버주재관의 경찰청 파견근무 등 국제공조 강화
- 경찰청 사이버센터를 '사이버안전국'으로 확대('14.1월)하고, 선제적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경찰·유관기관간 유형별 핫라인 가동 중('13.12월~)
- 검찰은 불법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등을 특별지시('14.2월)하고, 유관기관 대책회의('14.2월) 개최 등 이른 바 '대포와의 전쟁' 선포

2 추진 성과

□ 모바일기기 등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'기술형 사기'는 신·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크게 감소

- 스미싱은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건수('13년 2,351건 → '14.1~6월 2,229건) 증가로 피해가 90% 감소

- 메모리 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발생건수 급감

* 다만, 위·변조 사이트 개설을 통한 정보탈취를 시도하는 파밍은 공유기, 파일공유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시도 등으로 피해 방지에 한계

	사기 유형별 피해건수(단위 : 건, 경찰청)			
	'13년	월평균	'14.1~6	월평균
스미싱	29,761	2,480	1,317	220
메모리해킹	463	39	97	16
파밍	3,128	261	1,628	271
총계	33,352	2,780	3,042	507

□ '14.1~6월 중 검·경은 보이스포싱 사범 2,450명 검거(구속 126명), 불법차명물건 관련 사범 273명 구속

Ⅱ. 전기통신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한계

(가) 전기통신금융사기 공격유형 변화

- ① 신·변종 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은 지속적으로 다양화·지능화
 - 스마트폰의 앱카드 부정설치 사례 발생, 데이터 변조형* 메모리 해킹 증가세, SMS 탈취관련 악성앱 급증 등
 - * 이체정보 변경 등을 통해 해커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조하는 메모리 해킹
- ②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
 - 전통적 피싱사기인 보이스피싱은 '피해방지 종합대책('12.1)' 추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'14년 들어 증가 전환*
 - *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(건) : ('12년)476 ('13년)397 ('14.1~6월)475
 - 기술형 범죄의 시도가 어려워지자, 단순 전화사기로 풍선효과가 발생

(나) 대책 추진과정상 장애요인

- ① 관련 법령 개정의 지연
 -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개정필요 법령의 국회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정이 지연
- ② 금융사 등의 소극적 제도 수용
 - 메모리 해킹 방지를 위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강화 등 보안강화책의 비용부담 등으로 금융권의 제도도입 속도가 느린 편

(다) 대책의 사회적·기술적 한계

- ① 금융 사기 차단시스템의 인적·기술적 한계
 - 인적·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미싱·파밍·피싱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대응범위가 제한
- ②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부족
 - 대국민 예방홍보 지속에도 불구하고, 금융사기의 공격형태가 계속 다양화·지능화됨에 따라 신종 사기에 대한 사기성 인지가 부족

Ⅲ. 향후 추진과제

〈 추진 방향 〉

◆ 신·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되, 실질적 성과와 변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

- 국회, 이통사,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·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지연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제 추진
 - 대국회 설명 강화를 통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개정필요 법령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
 - 정부-2금융업권간 협의 개최를 통해 사기의심시 본인인증 추가 등 사기 대응책의 빠른 수용을 독려, 사각지대 없는 금융보안 확립
- 기술적 대응책의 고도화 등 기존 대책의 지속적 관리 및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
 - 스미싱 대응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, 국민들의 스미싱 방지대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미싱 확인 서비스 운영
 - 파밍·피싱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적용대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, 악성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악성코드 탐지·치료 방안 마련
 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을 통해 홍보효과 증대
- 신·변종 금융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반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 정책 과제 마련
 - 대포통장 발급에 대한 관리 강화, 은행권 자금이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반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

1 기존 대책 보완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

(가)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

① 스미싱 대응 능력 강화

□ 추진배경

- KISA가 스미싱 문자 차단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최근 난독화된 스미싱 악성앱이 대량 유통되어 분석·대응시간 지연
- 스미싱 차단시스템상 스미싱 문자 수집채널을 이동통신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스미싱 문자 수집에 한계

□ 제도 주요내용

- (KISA 시스템 성능개선) 스미싱 대응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통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, 악성코드 유형의 분류기법을 개발·활용
- (문자 수집채널 확대) 스미싱 문자 수집채널을 현재 이통사, 118신고센터에서 백신업체, 전문 보안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
- (확인서비스 운영)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의심스러운 문자에 대해 KISA가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 실시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'14.하반기) 백신업체, 보안업체 등 스미싱 정보 수집채널 확대, 스미싱 대응 시스템 성능개선
- ('14.하반기) 스미싱 확인 서비스 운영

② 스마트폰 보안 기술 강화

☐ 추진배경

-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**스마트폰 악성 앱이 급증**

* 악성앱 신고건수 : ('12년) 17건 → ('13년) 2,351건

- 스마트폰 분실, 악성 앱 감염 등에 의한 **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**

☐ 제도 주요내용

- 스마트폰 도난 및 분실시 **개인 데이터 삭제 기능(Kill-Switch^{*})**을 스마트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(OS)에 기본 탑재

* 킬 스위치 : 스마트폰 분실시 원격조작을 통해 개인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기능

- 팬택('13.2월), 애플('13.9월), 삼성('14.4월), LG('14.5월) 적용

- 악성 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**폰키퍼^{*}** 앱 이용 활성화 추진

* 폰키퍼 : 스마트폰 보안현황을 점검해주고, 스미싱 등 스마트폰 보안 위협 발생시 KISA에서 위협정보를 실시간 공지해주는 스마트폰 보안 앱

- 스미싱 차단 앱을 스마트폰 출고 시 **기본탑재토록 유도**

- 악성 앱 모니터링 범위를 현재 구글 및 해외 블랙마켓^{*}에서 이통사 등 **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**

* 블랙마켓 : 업체가 아닌 개인, 사설기관이 운영하는 비공식 앱 마켓

☐ 향후 추진계획

- ('14.하반기) 폰키퍼 실시간 보안공지 알림 시스템 확대 구축
- ('14.하반기)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 차단 앱 기본 탑재 유도, 스마트폰 보안 설정 용어 통일 가이드 마련
- ('15년) 악성앱 모니터링 대상 마켓 확대 추진

(나) 파밍·피싱사이트 차단 서비스 보완

① 피싱·파밍 사이트 차단 서비스의 적용대상 확대

□ 추진배경

- 피싱·파밍 사이트 차단 시스템*은 주요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2금융권 이용고객 보호에 한계

* 국내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탐지하여 사전 차단하는 ‘파밍사이트 차단서비스’ 운영중(‘13.9월)

- 통신사업자가 자율 시행 중인 피싱방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

□ 제도 주요내용

- 주요 공공기관,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보이스피싱, 파밍 차단 서비스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
- 번호 변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 국회 심의 중 (7.15일, 법사위 통과)

<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>

-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‘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’로 규정하고, 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규정(법§22②)
-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발신번호를 조작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통신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(법§84조의2③)
- 발신번호를 조작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발송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지(법§84의2③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‘14년 중)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
- (‘15년) 보이스피싱·파밍 차단 서비스 적용대상 확대

② 악성코드 유포 방지 방안 추진

□ 추진배경

- 최근 다양한 경로의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정보탈취, 파밍 시도 증가
 - KISA의 악성코드 점검에도 불구하고, 포털사이트 등 이용자 접촉이 많은 주요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지속 증가세*
 - *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 탐지현황 : ('10년)6,674건 → ('13년)17,750건
 - 이메일을 활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, 특히 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스피어 피싱*(Spear-phishing) 빈번
 - * 지인이 보내는 것처럼 메일을 위장하여 악성코드 감염 후 정보탈취

□ 제도 주요내용

- 악성코드 유포 집중점검 대상 홈페이지 확대
 - 쇼핑몰, 포털, 금융사 등 방문자수가 많은 사이트와 학교, 병원 등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악성코드 유포여부 탐지
- 악성코드 의심 이메일 수집·분석을 통한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 탐지 강화
- 악성코드 감염 PC 이용자에 감염사실을 빠르게 통보하고, 치료를 유도하는 알림 체계 구축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'14.하반기) 악성코드 유포 집중점검 대상 홈페이지 확대
- ('14.하반기) 중소 인터넷서비스업체*, 학교 등에 악성코드 치료 체계 확대 적용
 - * 일반적으로 유무선 전송·선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통신 및 방송 분야의 전송망 사업자
- ('15년)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 탐지시스템 구축

(다)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강화

□ 추진배경

- 지속적인 사기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,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능화되고, 공격유형이 지속적으로 변형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

□ 주요내용

- 신종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피해사례집을 발간, 금융회사 및 금융사기 피해지역 위주로 배포
-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캠페인 실시
 - * 대포통장 양도의 불법성, 금융거래상 불이익 등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홍보
- 신·변종 사기수법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시에 '정부 합동경보' 발령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'14.7~9월)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수집 및 사례집 작성
- ('14.4분기)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

(라) 금융사기 전담 수사 체계 강화

□ 추진배경

-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발족('14.4월) 등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 증가 등으로 금융사기범 단속에 한계

□ 주요내용

- 대포통장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수사인력 증대, 집중 단속 강화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'14.8~9월) 경찰, 대포통장 특별단속 실시
- ('14.하반기) 지방경찰청에 금융사기 단속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 추진

2 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한 추가과제 마련

(가) 대포통장 과다 발급 관리 강화

□ 추진배경

- 금융사기의 주요 매개체인 **대포통장**이 지속적인 관리·감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**발급·유통**되고 있는 실정
- 특히, 기존에는 **은행계좌**가 주로 활용되었으나, 최근 은행권의 계좌 관리 강화로 **증권계좌**를 활용한 **대포통장 발급**이 급증
- 이에 수신업무를 하고 있으나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 **증권사**에 대해 ‘**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**’을 지도하였음(‘14.5월)

<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>

단계	단계별 주요내용
사전방지	▪ 통장(카드)양도의 불법성 설명 및 확인 의무화 ▪ 예금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철저
사용억제	▪ 대포통장 모니터링 기법 및 최신 피해(예방)사례 공유 ▪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
사후제재	▪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 제한 ▪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참고자료로 활용

□ 제도 주요내용

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」 개정시행(‘14.7.29)에 따라 **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***에 대해 **개선계획 제출 명령** 가능
- * ‘14년 하반기 기준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
-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‘**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**’ 이행 **상황**을 지속 점검하여 대포통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‘14.하반기)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
- (‘14.하반기)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 현황 분석
- (‘15.1월)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**개선계획 제출 명령**

(나) 지연이체제 도입

□ 추진배경

- 우리나라에서는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자금이체 즉시 수취인에 대한 자금지급효력이 발생

* 참고 : 주요국 은행의 계좌이체 소요시간(출처:금융보안연구원)

	미국	독일	싱가포르	일본	영국
자행	실시간	2~3일	실시간	당일 ~1일	실시간
타행	1~3일		2~3일		

-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불법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도 실시간 자금이체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자금 회수에 한계

□ 제도 주요내용 (전자금융거래법 법사위 통과)

-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의 철회를 보장
- 착오 또는 불법적 이체지시에 의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실시간 이체거래의 단점을 보완

* 참고 : 지연인출제와의 비교

지연인출제('12.6월 시행)	지연이체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 300만원 이상 입금시, 자금 지급의 효력은 즉시 시행되나 인출은 10분이 경과해야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금이체시 자금지급의 효력이 일정시간 경과시까지 미발효

□ 향후 추진계획

- ('14년 하반기) 전자금융거래법 통과, 시행령·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
- ('15년 상반기) 금융회사들의 지연이체 시스템 구축

참고

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 추진 현황 · 계획

내용	경과	계획	소관 기관
문자발송·정보탈취 단계			
①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동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간 스미싱에 의한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차단 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통사·KISA간 협력을 통해 스미싱 대응 시스템 운영 시작('13.12.~) *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가 이통사로부터 스미싱 의심문자를 전달받아 분석한 뒤 악성앱인 경우 해당앱 다운로드 서버의 차단을 이통사에 요청 * '14.1~6월 중 2,229건의 악성앱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미싱 확인 서비스 운영(~'14.10월) 스미싱 대응 시스템 성능 개선('14.하) 악성앱 모니터링 대상 마켓 확대('15년) 	미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폰 출고시 백신의 기본 탑재 및 자동실행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모바일 백신 실시간 탐지기능을 활성화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탑재하도록 하고, 모바일 백신 탐지 기능 등 구현 여부를 지속 점검 	미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알 수 없는 출처'로부터의 앱 자동 다운로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알 수 없는 출처'로부터의 앱 자동 다운로드 제한* 적용 적용 *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정식 앱 마켓이 아닌 '알 수 없는 출처'로부터 앱 다운로드를 매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설치를 제한 		미래부

내용	경과	계획	소관 기관
----	----	----	----------

② 개인·기업 사칭 문자 차단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 발송문자의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대폰발송 번호변경 문자 차단 실시('14.2.~) 웹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제도*를 모든 이통사에서 제공토록 함(~'14.7월) * 인터넷 발송문자 본문에 식별문구 ([Web발신])을 표시하는 제도 		미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 사칭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 개발·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사칭 인터넷발송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홍보강화로 가입기관이 크게 증가* * 기업사칭 번호도용 서비스 가입기업 : ('13년말) 41개사 → ('14.6월말)524개사 웹상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일반 개인까지 확대(~'14.7월) 		미래부

③ 파밍·피싱·사기사이트 사전 차단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파밍 사이트 차단 시스템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파밍 사이트로의 접속을 감지·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¹⁾('13.9월~) * '14.1~6월 중 파밍사이트 접속 IP 176만건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단 시스템 적용대상 확대('15년) 	미래부
--	---	--	-----

내 용	경 과	계 획	소관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싱 사이트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생성되는 피싱사이트를 조기에 발견·차단('13.12월~) 중 * '14.1~6월 중 피싱사이트 2,096건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단 시스템 지속 운영 악성코드 유포 집중점검 대상 홈페이지 확대('14년.하)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 탐지시스템 구축('15년) 	미래부
④ 사기이용 전화번호 이용 정지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의 법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법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 (7.15일, 법사위 통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신번호 변작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통과 추진('14년) 	미래부
불법이체·결제 단계			
① 新입금계좌지정제 시행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지정 입금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제도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新입금계좌지정제 가이드라인 마련, 은행권에 배포('14.3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4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제도 도입·홍보 계획 수립, 시스템 정비 	금융위
② 메모리 해킹 대응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강화 (확장E2E 적용) 예비거래 비정상 종료시 본인 인증절차 강화(추가인증 실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행권,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에 메모리 해킹 방지기능 보완('13.12월) 수취계좌 변조의심거래시 추가 본인인증 실시 지도('14.7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은행금융기관에 메모리 해킹 대응 조치의 빠른 도입 독려 	금감원 금융위 금감원

내 용	경 과	계 획	소관 기관
③ 해킹이용 계좌 지급정지			
•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법적 근거 마련	• 해킹이용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쉐금융권에 행정지도 실시('14.7월)	• 해킹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「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방지 특별법」 개정 추진	금 융 위
④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			
• 휴대폰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 마련	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시신설의 근거를 규정하는 「정보통신 망법」 개정완료('14.5월 본회의통과)	• 휴대폰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 적용 등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	미 래 부
⑤ 대포통장 과다발급 관리 강화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여 은행권 위주로 지도 • 「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」의 증권회사 대상 지도('14.5월) 	•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명령('15.1월)	금 감 위 원
④ 지연이체제 도입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연이체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('14.하) • 지연이체제 관련 시스템 구축('15.상) 	금 융 위

내용	경과	계획	소관 기관
수사 단계			
① 대포통장 처벌범위 확대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포통장 대여자 등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가를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추진 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4년 중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	금융 위
② 국제공조 강화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·중간 수사협업체 활성화, 핫라인 구축, 관련 정보공유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韓검찰·中공안부간 수사협업체 구성을 추진(‘14.4월), 합동대응 목적 실무회의 개최(‘14.4월) 美FBI 사이버주재관의 경찰청 파견 근무 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4.9월 개최될 韓·中 경찰 협력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사협조를 요청 中 사이버주재관 도입 추진 	법 경 무 찰 부 청
③ 집중단속 및 기획수사 확대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찰 전문수사부서 투입, 집중 수사관서 지정을 통한 기획수사 실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찰, 불법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등을 특별지시(‘14.2월)하고, 유관 기관 대책회의(‘14.2월) 개최 등 이른 바 ‘대포와의 전쟁’ 선포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발족(‘14.4월) 경찰청 사이버센터를 ‘사이버안전국’으로 확대(‘14.1월)하고, 선제적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경찰·유관기관간 유형별 핫라인 가동(‘13.12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법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보이스피싱 유관기관간 수사공조체계를 구축 	법 경 무 찰 부 청

내용	경과	계획	소관 기관
사기예방·홍보			
□ 대국민 인식제고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계기관 합동보고 및 대국민 홍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KBS 개그콘서트 ‘황해’팀이 출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홍보동영상을 제작·배포(‘14.2월) 피해예방 홍보 리플릿(3.5만부) 배포(’14.4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집 배포(’14.4분기)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사기예방 홍보를 연중 지속 신·변종 사기수법 발생·확산시 ‘정부합동경보’ 발령 	조 기 관